

투데이

탄소배출권거래소 나주 유치 사실상 무산

“부산 유치” 주장 환경부 주무 관청 선정 전남도 “차기 정부로 결정 미뤄야” 반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나주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최근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주무 관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13일 전남도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무 관청을 환경부로 결정하면서 배출권 거래소 유치 경쟁에서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이하 KRX)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는 전남과 부산이 뛰어 들었다. 전남도는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의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어 왔다.

지식경제부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이하 KPX)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금융시스템인 만큼 부산에 있는 KRX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소배출을 산업·발전분야로 보고 KPX에 설치할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여겨 KRX에 설치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정부가 환경부의 손을 들 어준 셈이다.

이에 전남도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금융거래소에 두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는 실물 거래가 이뤄지는 전력거래소나 기후거래소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치

했는데 우리 정부는 정확한 현실 파악 없이 ‘영남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주무관청이 된 환경부 장관이 신청을 받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빠르면 올해 연말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이 유리해졌다.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소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특위 ‘깜코’ 본격 행정조사

650만달러 송금 결정 강시장 개입 여부 집중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부실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법인 ‘깜코’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본격적인 행정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에서는 깜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 타당성을 비롯한 650만 달러 자금 송금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강운태 시장의 개입 여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예결특별회의실에서 노회용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과 김병술 깜코 대표이사, 강왕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증인 11명과 참고인 5명을 대상으로 깜코 부실투자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위 위원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파트너사인 K2AM사의 대표인

브리튼 리와 강 시장이 면담을 하게 된 과정과 배경, 깜코 사업의 타당성과 이미 송금한 650만 달러의 성격 및 사용처, 3D컨버팅 기술 수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가격의 적정성과 3000만 달러 규모의 물량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특히 650만 달러 송금 과정에서 일부 이사회 승인 절차가 잘못 처리된 점과 사전에 강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출석기일은 다음달 4일로 잡혔으며,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송귀근 전 행정부시장, K2AM사의 브리튼 리 대표이사, K2EON사 토마스 스미스 대표이사 등은 오는 27일 출석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기간제 근로자 51명 정규직 전환

광주시는 13일 시청과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전환을 오는 8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분청 18명, 직속기관 27명, 사업소 46명 등 총 91명. 이 가운데 일

시·간헐적 업무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40명을 제외한 51명 전환을 무기(無期) 계약직 등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 계약직은 임급(연봉 2000~3000만 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적지만 정년(60세)이 보장된다.

/최권일기자 cki@



“우리나라 태극기 그렸어요”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구립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태극기를 펼쳐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보배·양학선·기성용·최은숙 광주 온다

21일 광주 출신 메달리스트 환영행사·사인회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광주 출신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출신으로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가족, 체육단체 임직원 등 1000여명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궁 여자단체전과 개인전 2관왕에 오른 광주시청 소속 기보배(24)와 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0)이 참석한다. 또 여자 펜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광주 서구청 소속 최은숙(26)과 동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표팀 기성용(23·셀틱)도 자리를 함께한다. 이 자리에는 선수들의 가족과 코치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선수들과 가족들은 행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밝히고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하며, 이후 공연 관람 등의 행사에 참석한 뒤 사인회를 가질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쌀보리 주산지 전남→전북, 감귤 제주→전남, 사과 경북→강원

뜨거워진 한반도 농작물 지도까지 바꿨다

전남이 주산지였던 쌀보리가 전북에서 더 많이 재배되는 등 한반도 아열대 현상으로 농작물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해 주로 남부 지방에서 재배된 쌀보리의 주산지가 전남에서 전북으로 북상했다. 쌀보리 재배면적은 지난 1990년에 전남이 5만5253ha, 전북은 7455ha로 전북이 전남에 한참 뒤졌다. 이후 전남의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고, 전북은 소폭 늘어나 2010년 전남 9373ha, 전북 9621ha로 역전됐다.

가을감자 재배면적도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전북은 1990년 중반부터 전남을 추월하고 있다. 최근엔 전남의 두 배가량으로 차이가 났고 지난해 기준 전북은 839ha, 전남은 490ha였다.

또 기온이 오르면서 농작물 재배한계가 북상해 ‘제주 감귤’ ‘청도 복숭아’ ‘경산 포도’ ‘대구 사과’ 등과 같은 지역 특산물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로 제주도에서만 생산된 감귤 재배지는 전남, 경남 등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복숭아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동해

(東海) 발생이 줄어 다른 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었고, 포도 역시 재배지가 북상했다.

온대 과일인 사과는 기온이 오른 탓에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1990년 4만8833ha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5만ha를 유지하다가 최근 3만ha대로 떨어졌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은 1992년 3만6355ha로 역대 최고치에 올랐다가 지난해 1만924ha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사과 재배면적이 2007년 114ha에서 올해 434ha로 최근 들어 네 배가량 급증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폭염 가축 폐사 전남 32만마리

올 여름 더위로 전남지역에서 3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전국에서 186만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폭염으로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185만7347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가축별로는 닭이 176만694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7만9290마리), 메추리(1만1203마리)가 뒤를 이었다. 돼지(727마리), 소(33마리) 등의 피해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북(68만6000마리), 전남(32만8000마리), 경기(29만9000마리), 충남(23만9000마리) 등의 피해가 컸다. 또 전북 부안에서는 바지락 양식장 66ha에서 집단 폐사가 일어났다.

日帝, 학도병 거부 조선인 학생 400여명 강제노역

강제동원 피해조사처 조사결과 태평양전쟁 후반기 일제의 학도병 지원을 거부했다가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학생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이들을 일종의 ‘사상범’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학도병 지원 요구를 거부하고 노무자로 끌려간 학생은 최소 125명이다.

이들은 당시 신문 보도를 비롯한 관련 자료에서 ‘응징학도’ ‘징용학도’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1943년 11월 조선총독부가 학도병 지원을 거부한 조선인 학생에 대해 산업체 징용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구인돼 국내 여러 사업장으로 끌려갔다. 1944년 일본 제국의회 자료에 언급된 징용학도 규모는 125명이다. 그러나 징용학도 1개 차수 인원이 150~200명이었고, 최소 2개 차수가 있었다는 복수의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위원회는 적어도 400명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했다.

위원회가 공식 확인한 징용학도 65명의 신상을 보면 경성제국대(현 서울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일본 와세다대, 메이지대, 도쿄제국대 등 국내외의 유수 대학 재학생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작업장으로 동원된 탓에 국외 동원 피해자들만 지원하도록 규정한 현행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하 고

광산김씨 애순(愛順)氏께서 노환으로 2012년 8월 12日午後10時 (陰 6月25日) 별세하셨기에 부고합니다.

발인일시: 2012년 8월 15日 09時
발인장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장지: 광주광역시 북구 장덕동 망향의 동산

2012년 8월 14日

(개별부고생략)

護喪	子 婦	嗣子
金李許車林	黃	載
在好宰成珉一世蓮	淳	順
坤順皓萬廷順媛	(서울언주초등학교 교사)	
	(H·H레저(주) 회장)	

연락처: 장례식장 (062) 22013352

당사 黃載淳代表理事어머님께서 2012年 8月 12日 노환으로 별세 하였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푸른건설 주식회사

당사 梨谷 許宰皓會長님의 장모님께서 2012年 8月 12日 노환으로 별세 하였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大洲 그룹
光州日報社
담당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합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H·H개발(주)
H·H레저(주)